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 방안



일시 및 장소

2022년 01월 27일(목) 14시 30분, 코리아나호텔 / 글로리아홀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재)기후변화센터

주 관

한국에너지공단, (재)기후변화센터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	14:30~14:40 (10분)	[개회사] 김창섭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환영사]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기조 연설	14:40~15:00 (20분)	[기조연설]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前 기후변화대사) "파리협정 제6조 지침 결과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발제	15:00~15:40 (각 20분)	[발제1] 임석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장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발제2] 이광호 한국환경공단 상쇄제도운영부 부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 국내 이전·배출권거래제 활용"
휴식	15:40~16:00	BREAK TIME
토론	16:00~17:30 (90분)	[좌 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백진우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 팀장 -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유인식 IBK기업은행 팀장 -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 -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

[기조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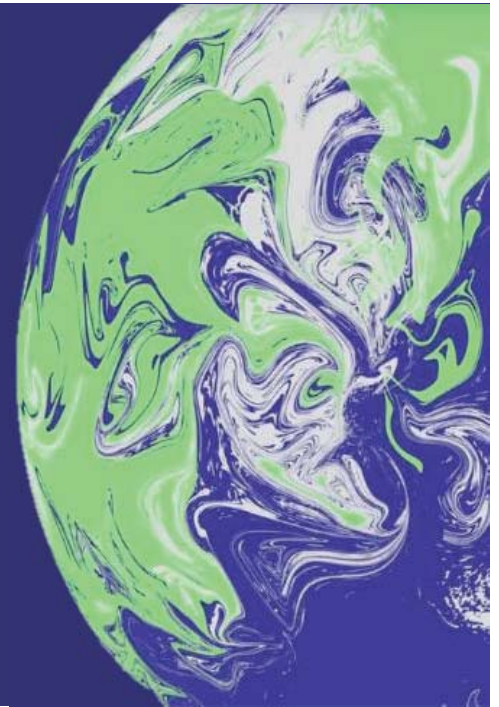
파리협정 제6조 지침 결과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前 기후변화대사)

파리협정 제6조 이행 규범과 우리의 정책방향

2022.1.27.(목)
기후변화센터(재) 공동대표
최재철



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표현 등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모두 본 프레젠테이션의 제작자인 (재)기후변화센터에게 있으며, 만일 (재)기후변화센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전제, 배포, 사용하는 등 본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는 물론이고 그 행위를 지시하거나 감독한 당사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8 Climate Change Center. All rights reserved.

190 Yulgok-ro #701, Jongno-gu, Seoul 03127, Korea T. +82(0)2-766-4367 F. +82(0)2-766-4361 <http://www.climatechangecenter.kr/>

목 차

I.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취지와 배경

1. 파리협정 제6조의 목적
2. 파리협정 제6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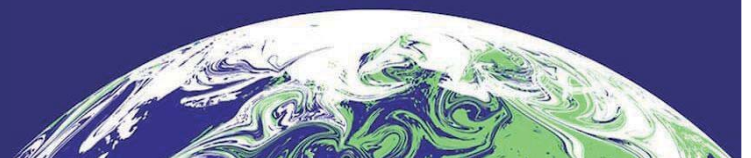
II. 제6조 이행 규범 채택 내용과 의미

1. 이행 규범 채택 내용
2. 이행 규범 채택의 의미

III. 우리의 대응 방향

1. 제도적 차원의 준비 태세
2.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 방안

**THE CLIMATE
HAS NO BORDERS**



I.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취지와 배경

1. 파리협정 제6조의 목적

- 당사국간의 배출 감축권의 이전을 통해 (효율적) 기후행동 목표달성에 기여
- 민간부문의 기후 친화적, 비용효과적 해결 방안 개발을 위한 투자유인 동기부여
- 당사국간의 굳건한 기후행동 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비시장 접근 강화
 - ☞ 논의 토대: KP 유연성체제, NMM, FVA, NMA, VCM 등

2. 파리협정 제6조의 구성

- 제 1항: 기본 목적과 취지 제시(NDC 이행을 위한 자발적 협력 추구, 높은 수준의 완화와 적응 행동,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 촉진): 공동 목적과 공통 기준
- 제 2항: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적 접근(Nationally determined 취지 부합)
 - 각 당사자의 서로 다른 여건, 다양한 형태의 양자/다자 협력, 혁신적 협력 수단
- 제 4항: 파리협정 당사자 총회 권한하의 6.4 메커니즘(Centrally managed 취지 부합)
 - 글로벌 탄소가격제와 시장 형성 기반(carbon price convergence 효과기대)
- 제 8항: 비시장 접근의 목표 (No One Leaves Behind 취지와 UNSDGs 부합)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Nothing agreed until everything agreed*

Copyright © 2008 Climate Change Center. All rights reserved.

II. 제6조 이행 규범 채택 내용과 의미

1. 이행 규범 채택 내용

- 제6.2조: 완화결과물(MOs)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지침(guidance) 합의
 - ITMOs 규정, 참여자격, 이중계산방지/상응조정, 투명성
 - ☞ Bottom-up 접근,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
- 제6.4조: 6.4 메커니즘을 위한 규칙, 방식, 절차(RMP) 합의
 - 6.4 메커니즘 정의와 이행, 감독기구(SB) 설립 및 역할 규정, 참가자 책임, CDM/CERs 이전
 - ☞ Top-down 접근, 글로벌 탄소 시장 인프라 구축 및 개도국 지원
- 제6.8조: 자발적 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작업 이행(Glasgow Committee for Non-market approaches): LDC, SIDS 그룹 배려와 2030 UNSDGs 이행

2. 이행 규범 채택의 의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DM 타입 사업과 글로벌 탄소시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제6.2조의 국가간 협력 사업은 이행지침 합의 없이도 추진 가능한 반면 제6.4조 사업은 RMP 합의 없이는 추진 불가능
 - 이미 진행중인 양자 및 다자간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타결
- 향후 2-3년간은 행위자 그룹(국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등) 중심으로 제6.4조 이행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Learning by Doing” 활동 강화 전망

Copyright © 2008 Climate Change Center. All rights reserved.

Ⅲ. 우리의 대응 방향

1. 제도적 차원의 준비 태세

- NDC와 2050 탄소중립전략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가버넌스 체제 개선
 - 탄소중립위, 국조실, 유관부처들의 유기적 협조: 이해, 협의 조정 기능
 - ※ 국내 ETS 부문과 Non-ETS 부문간의 차별적 접근 전략 필요
 - 과제: 국제 탄소시장, 기후클럽, 양자 및 다자 협정, ETS 연계 및 CBAM 등
- 정부/기업/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협력 조정 플랫폼 구축
 - 국가/지역별로 package 형태의 접근 전략(우선순위 설정 등) 필요
 - 특히 PA 제6.2조 이행을 위한 종합 전략(ODA등)의 수립 중요(타국 사례)

2. 파리협정 제6조 이행 방안

- 단기적 과제: 집중 협력 파트너 선정, 국내 시범사업실시(6.4 활동 준비)을 통한 역량 비축과 이를 위한 자발적 상쇄 배출권 시장 개설
- 중장기적 과제: 사업개발, MRV 및 국제 협상을 위한 전문기구 설립과 인력 양성 (지역 및 글로벌 탄소시장, 탄소국경조정제도/기후클럽 대비)

참고사항. 타국의 사례



[Joint Statement on Climate Change Cooperation Switzerland-Thailand.pdf](#)
(PDF, 1 MB, 28.05.2021)

Joint Declaration of Intent with Iceland

 Declaration of Intent with Iceland on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PDF, 71 kB, 20.07.2021)

Déclaration Conjointe avec le Royaume du Maroc

 Déclaration Conjointe du Conseil Fédéral Suisse et du Gouvernement du Royaume du Maroc sur la Coopération au Titre de l'Article 6 de l'Accord de Paris (PDF, 162 kB, 03.12.2021)

Interested countries or stakeholder groups can contact the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at swissflex@bafu.admin.ch. The Foundation for Climate Protection and Carbon Offset (KIK) is responsible for funding specific projects.

Foundation for Climate Protection and Carbon Offset (FCCO) (2012)

COP26: Switzerland touts Article 6-style agreements



11 November 2021 | Kevin Adler

Although finalizing a deal o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s a task yet unfulfilled at the COP26 meeting in Glasgow, representatives of Switzerland called the country's bilateral carbon-trading agreements with six nations the model for a global Article 6 pact.

"Article 6.2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is alive," Swiss Minister of Transport Simonetta Sommaruga [told reporters](#) on 11 November.

Peru, Ghana, Senegal, Georgia, Vanuatu, and Dominica each signed carbon trading plans with Switzerland that will provide frameworks for them to produce verifiable carbon reduction credits that the Swiss will purchase and use as part of meeting their emissions reduction obligations under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Some of the agreements were signed prior to COP26, and others were linked at the climate meeting.

GENEVA, SWITZERLAND; STOCKHOLM, SWEDEN - 25 August 2021

Gold Standard and the Swedish Energy Agency announce a partnership to facilitate the Swedish Government's acquisition of quality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s)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serving to serve as a model for broa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Rather than initiating new processes, Grid Standard rules, framework, and infrastructure will be adopted for use by the Swedish Energy Agency to facilitate their Article 6 activities. This is expected to reduce transaction costs, increase certainty over supply for the government, reduce risk for project developers, and give independent assurance to all stakeholders that rigorous requirements are in place to ensure integrity and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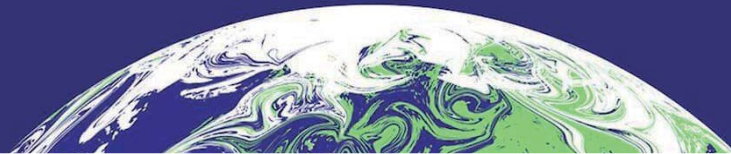
Overview of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Japan has signed bilateral agreements with 17 countries to start JCM (as of June 20

Partner Countries	Start from	JCM Model Projects (registered)	JCM Model Projects (Credit issued)	JCM Model Projects
Mongolia	Jan. 2013	4	4	5
Bangladesh	Mar. 2013	3		4
Ethiopia	May 2013			1
Kenya	Jun. 2013	1	1	2
Maldives	Jun. 2013	1	1	1
Vietnam	Jul. 2013	11	5	35
Laos PDR	Aug. 2013			5
Indonesia	Aug. 2013	19	8	42
Costa Rica	Dec. 2013	1		2

Thank You

**THE CLIMATE
HAS NO BORDERS**



[발제 1]

국내외 외부감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

임석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장

국내외 외부감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2022. 1.27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장 임석기

발표 순서

- 1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 2 외부사업 추진현황
- 3 외부사업 필요성
-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1.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상쇄제도 개념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란?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 기재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등



1.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개념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국내에서 시행된 CDM 사업도 포함)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배출량 : 125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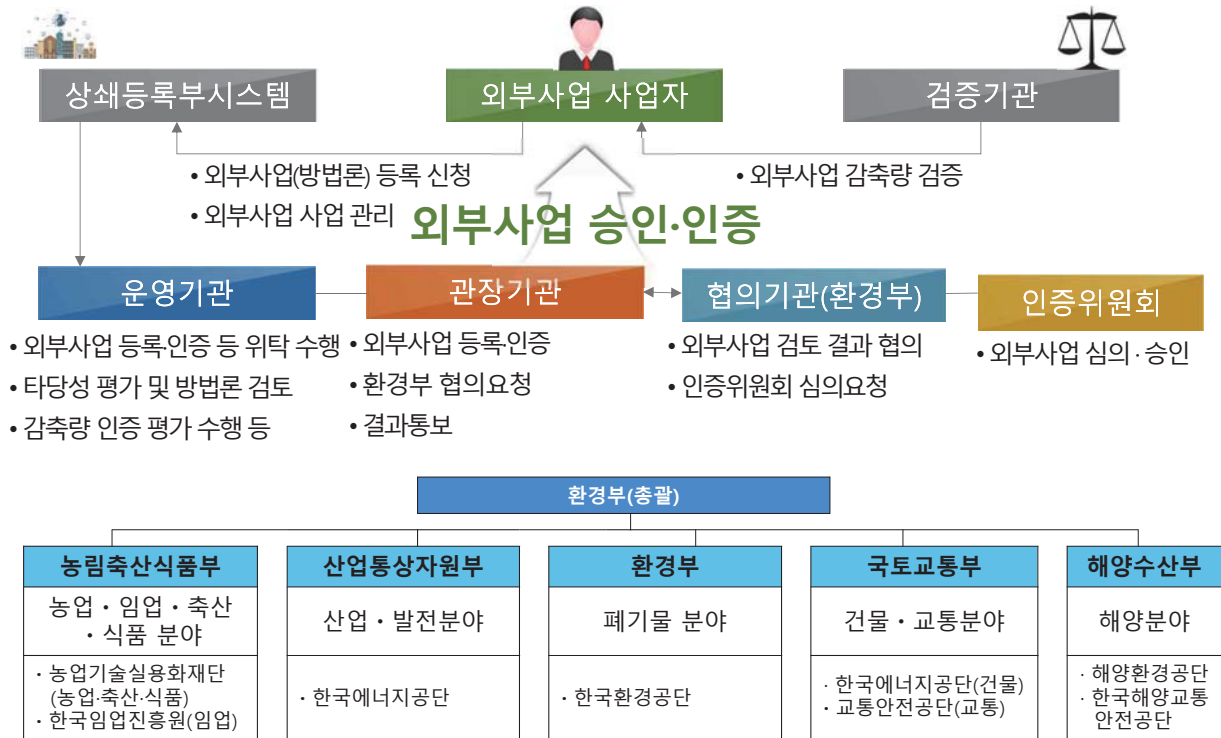
⚠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함

- ①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② 탄소흡수실적이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함
- ③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의한 사업
- ④ 지속적으로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한 사업
- ⑤ 배출량 인증위원회 **승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⑥ 사업시작일이 '**10년 4월 14일 이후**에 발생'된 사업
- ⑦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 : 2기부터 인증(16. 6.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내 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 3기부터 인증

* 근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승인 대상), 제10조(사업 시작일)

1.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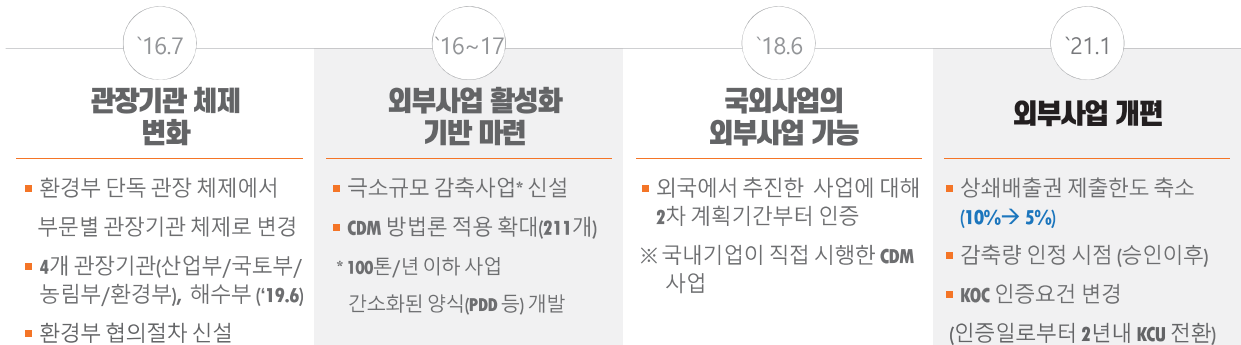


© KEA 2021

3

1.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추진경과



2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7.1월)

- (국내 외부사업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감축사업을 발굴 → 기업의 외부사업 활성화 추진
- (해외 감축활동 촉진)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조기에 거래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3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9.12월)

- 외부사업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 및 배출권거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20~'21) → 4기 운영방향 결정

© KEA 2021

4

1.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3차 할당계획 주요내용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시행령 개정 '21.3)
 - 3차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는 '할당대상업체별로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
 - 2차 계획기간까지는 총 10%(해외분 한도 5%) 였으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및 3차 할당계획에 따라 국내 / 해외 구분 없이 5%까지만 인정
- KOC 인증요건 및 KCU 전환기준(지침 개정 '21.1)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 이내* KOC 인증 신청**
 - * '20.12.31.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은 '22.12.31.까지 KOC 인증 신청(지침 제28조 제4항)
 - ** 다만, 소규모·극소규모 및 산림분야 감축사업은 인증 신청 기한 미적용
 - 인증된 KOC는 국가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인증일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KCU 전환
 - (10.4.14 ~ '20.12.31. 인증분*) '22.12.31.까지 KCU전환 신청 시에만 승인
 - * 외국 감축량의 경우에는 '16.6.1 ~ '20.12.31. 인증분
 - ('21.1.1 이후 인증분) 인증일로부터 2년 내 KCU전환 신청 시에만 승인

2. 외부사업 추진현황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현황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전체)'22.1월 1일 기준 총 272개의 외부사업 방법론 존재
 - 일반 61개(산업발전부문 21개), CDM 방법론 211개

▶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	▶ 고효율 도로조명 설치 사업의 방법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사업의 방법론	▶ 열공급시설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용가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를 통한 전력생산 및 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
▶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 주거용 시설의 심야전기보일러에서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 사업의 방법론
▶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
▶ 전력절감설비 설치 사업의 방법론	
▶ 가스절연개폐장치 검사용 SF6 회수/정제 및 재사용을 통한 SF6 감축사업의 방법론	

2. 외부사업 추진현황

(예시) 고효율 설비 교체(공기압축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개요

- (유형) 단일감축사업(극소규모), 고정형(10년)
- (내용) 기존 100HP 컴프레서 1대를 고효율 컴프레서(VSD) 1대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 설비 교체 후 기존 공기압축기는 폐기(폐기확인서 제출 必)
- (평가) 방법론 적용성 평가
 - 1)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선 또는 교체
 - 2) 에너지사용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기록 가능
 - *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적용 가능
 - 3) 고효율 설비 교체 외 감축효과 미포함
 - 4) 신규 설치 및 용량을 증대 시키는 사업에는 적용 불가
 - 5) 에너지 절감 목적의 유지보수 활동에 적용 불가
- (감축량)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91\text{tCO}_2\text{eq}$
 - 사업 전/후 단위 유량당 소비전력량 (kWh/Nm^3) x 사업 후 토출용량 ($\text{Nm}^3/\text{시간}$) x 사업 후 가동시간 (시간/년)
 - * 사업 전/후 단위 유량당 소비전력량 차이로 감축량 발생

사업 전, 후 설비



<개선 전 명판>



<개선 후 명판>



<사업 후 공기압축기 운전일지>



<폐기물 처리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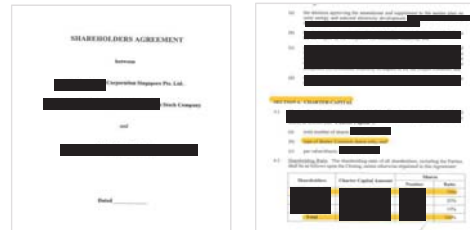
2. 외부사업 추진현황

(예시) 국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_(나)유형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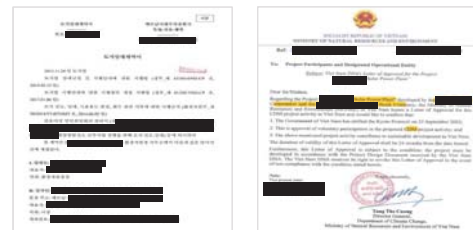
- (유형)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 - (나)유형, 단일감축사업(일반), 갱신형(7년)
- (내용) 국외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태양광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산된 전력을 인근 전력계통에 공급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 (평가) UNFCCC 등록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1) CDM 사업 공통
 - 국내 기업이 해외 CDM 사업의 최초 등록시점부터 사업참여자 또는 연락창구로 참여하였는지 여부 평가
 - 2) (나)유형 사업
 - 국내 기업 :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사업주체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 여부 평가
 - 사업주체 : 사업주체의 실제 입증 및 CDM 시설 소유/운영 입증, 사업주체의 해당 사업 참여 입증 여부 평가
- (감축량) CER 승인량(발전 계측값) X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국내 기업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

국내 기업 지분비율 확인 서류



<Share holder Agreement>

사업주체 실제 입증 및 CDM 소유/운영 입증 서류



<토지임대계약서>

<국가소유증서>

2. 외부사업 추진현황

외부사업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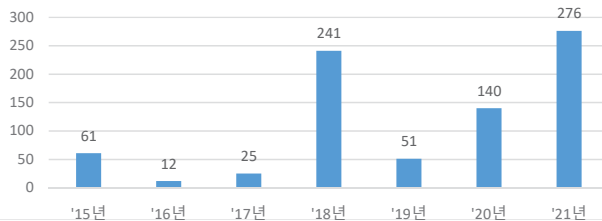
- (전부문) '22.1월 기준 총 1,591건 승인 신청, 806건(50.7%)이 외부사업으로 승인·등록

외부사업 등록	국내			국외	합계
	일반	CDM	소계		
신청(건)	1,244	119	1,363	228	1,591
승인(건)	556 (69.0%)	99 (12.3%)	655 (81.3%)	151 (18.7%)	8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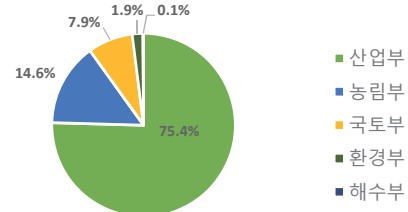
- (산업발전부문) 총 1,145건 승인 신청, 608건(전부문 대비 75.4%) 승인·등록

외부사업 등록	국내			국외	합계
	일반	CDM	소계		
신청(건)	814	103	917	228	1,145
승인(건)	369 (60.7%)	88 (14.5%)	457 (75.2%)	151 (24.8%)	608 (100%)
산업발전부문 신청 비중	65.4%	86.6%	67.3%	100%	72.0%
산업발전부문 승인 비중	66.4%	88.9%	69.8%	100%	75.4%

전부문 연도별 외부사업 승인(건)



관장부처별 외부사업 승인 비율



2. 외부사업 추진현황

감축량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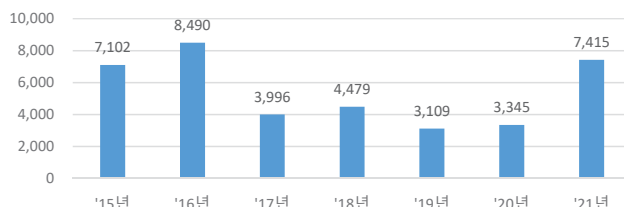
- (전부문) '22.1월 1일 기준 총 1,060건 인증 신청, 695건(65.6%, 37,936천톤) 인증 승인

감축량 인증	국내			국외	합계
	일반	CDM	소계		
신청(건)	270	401	671	389	1,060
인증(건)	217	396	613	82	695
인증량(천톤)	955 (2.5%)	32,893 (86.7%)	33,848 (89.2%)	4,088 (10.8%)	37,9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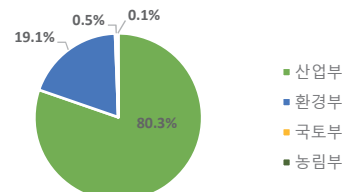
- (산업발전부문) 총 922건 인증 신청, 573건(30,458천톤, 총인증량의 80.3%)인증 승인

감축량 인증	국내			국외	합계
	일반	CDM	소계		
신청(건)	195	338	533	389	922
인증(건)	158	338	491	389	573
인증량(천톤)	676 (2.2%)	25,694 (84.4%)	26,370 (86.6%)	4,088 (13.4%)	30,458 (100%)
산업발전부문 인증량 비중	70.8%	78.1%	77.9%	100%	80.3%

전부문 연도별 감축인증량(천톤)



관장부처별 감축인증량 비율



2. 외부사업 추진현황

감축량 인증 전망

- (전체 인증현황) '22.1월 기준 37,936천톤 인증승인

감축량 인증	국내			국외	합계
	일반	CDM	소계		
인증량(천톤)	955 (2.5%)	32,893 (86.7%)	33,848 (89.2%)	4,088 (10.8%)	37,936 (100%)

- (향후 전망) 국내 외부사업은 지속적 축소 예상, 국외 외부사업 인증량 증가 예상
 - (국내) CDM 사업 인증량 대부분 KOC 전환완료
일반사업 자발적감축사업(KVER) 인증유효기간 만료로 대부분 인증 종료(잔여 445천톤 수준)
잔여 일반사업은 중소기업체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 극소규모(100톤미만) 사업이 대부분
 - (국외) 국외 외부사업 신청 및 등록 건수 증가, 인증유효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량 지속적 증가

3. 외부사업 필요성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 기업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핵심기능
 -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시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을 선택, 활용함으로써 배출권제출의 유연성 보장
 - 국내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도의 중요한 동력(motivation) 내지 방아쇠(Tigger)

국가 NDC 달성 활용

- 국외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연계 뿐 아니라 국가 NDC 달성 활용 가능(COP26 논의 결과)
 - 현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신청되는 국외 CDM 사업의 대부분은 쿼스토프 보급사업, 식수정수 보급사업 등과 같은 개도국 지원사업으로 투자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 존재
 - 국내 외부사업의 축소 전망에 따라, 국외 신규사업 등 발굴을 통한 외부감축사업 확대 필요

3. 외부사업 필요성

저탄소 사회 기반 마련

- 중소기업, 민간부문 감축기술 보급 및 사회전반의 감축기반 마련
-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은 연료전환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다수
→ 중소기업의 고효율 설비 교체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신규 감축 기술이 보급 확대**
- 최근 기업의 CSR 활동 방향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환, **외부사업으로 연계 사업모델 확대**
- * CSR 활동으로 추진된 감축사업을 외부사업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 다시 CSR로 환원

산업 생태계 활성화

- 대중소 상생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 발전 공기업 중심 배출권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증가 → **대중소 상생 효과 부각**
* 한국중부발전 “코미에너지 사업”, 한국서부발전 “농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 외부사업(감축설비 도입) 시 투자업체, 감축설비 생산업체, 외부사업 검증기관·컨설팅 업체 등 **관련 산업 육성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존재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신사업 발굴 확대

- (가칭) ‘외부감축정책협의회’ 신설을 통해 국내외 외부감축 정책 협의
- 외부사업자, 컨설팅기관, 감축기술 전문가, 검증기관 등 참여를 통한 사업 발굴
-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통한 정책반영 및 외부사업 활성화 도모
- 국내 다양한 외부감축수단 발굴을 통한 사업화 필요
- 수소생산 및 활용, 친환경 원료 전환, CCUS 등 새로운 감축수단에 대한 방법론 개발
- 이를 활용한 국내 신유형의 외부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 → **국외 감축사업으로 확대**

< 2030년 산업발전 부문 주요 감축방안 >

- (전환)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 도입 등
-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 → 전기로 대체, 미래기술*의 조기 상용화 등
* 전로에 철 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 열량 저감기술 등
- (석유화학) 친환경 원료로 전환(납사 → 바이오 납사),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등
- (시멘트) 에너지효율 개선(예열기, 냉각기), 연료 전환(유연탄→폐플라스틱, LNG → 전기) 등
- (기타) 연원료의 전력화, 고효율기기·FEMS 도입 확대, 산업 단지 열병합 발전시설
친환경연료 이용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등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상생모델 확대

- 최근, 기업의 화두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업의 ESG를 활용한 외부사업 연계 상생모델 확대 필요

한국서부발전, EGS위원회 신설-공기업 상생경영(매일경제, '22.1)

LG전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ESG 상생 확대 " (파이낸셜뉴스, '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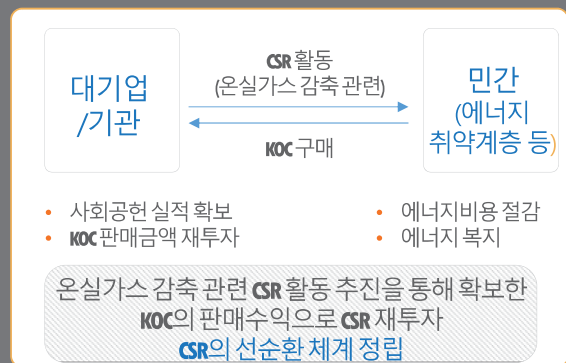
재계, 내년에도 ESG 경영 속도 낸다(이뉴스투데이, '21.12)

ESG 통한 중기와 상생 SK E&S '대통령 표창'(파이낸셜뉴스, '21.11)

Case 1. 감축설비 or 비용 투자 & KOC 구매 모델



Case 2. CSR - 외부사업 연계 모델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 및 홍보 강화

- 중소기업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는 대기업 또는 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외부사업 추진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및 감축량 인증관련 보고서 작성 시 주요 오류 유형 발생
- 외부사업자 및 컨설팅 기관 등에 대해 교육 강화 필요
 - (운영기관) 외부사업 평가 시간 단축 및 다량의 평가를 통해 운영 효율화 도모
 - (사업자/컨설팅기관) 조기 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을 통한 지속적 외부사업 확대 가능

주요 오류 유형

-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방식, 추가성 입증 등의 항목 작성 오류
- 국외 사업의 증빙자료 제출
 - 다유형의 경우 보급사실 증빙 미미, MoC 유효날짜 확인 불가(국내기업 등이 PP 또는 FP 등록여부) 등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목표관리제 내 외부사업 추진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감축에 대한 혜택?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는 존재하나, 온실 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혜택은 부족**

온실가스 감축 혜택 부재로 인한 기업 투자 한계

- 온실가스 감축을 해도 배출권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위한 동기 부족 (ETS업체는 감축시 배출권 확보)

국내 외부사업의 낮은 감축량 규모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상당히 작아, 배출권거래제 내의 **상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어려움** 존재
- 외부사업 추진 대상 확보 필요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이행과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대안-1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초과 감축실적의 외부사업 등록/인증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내부감축실적 인정과 유사한 개념
- 초과감축분 중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증된 감축량은 **KOC** 발급

대안-2

외부사업 추진 설비의 관리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서의 **COM** 사업과 유사한 개념
- 외부사업 대상 설비를 관리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하여 목표관리 실시

대안-3

외부사업 추진 가능 특정 요건 개발 및 적용

- 대중소 상생협력 등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게 **CSR** 차원으로 추진 되는 사업에 한해 외부사업 추진 허용
- 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17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극소규모 감축사업 간소화

KOC 판매 수익 < 외부사업 소요 비용

컨설팅 비용 절감

극소규모 감축사업 전용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개발

※ 현재 7개 방법론 12개 기술 적용가능(산업발전)

모니터링 비용 절감

모니터링 인자 중 측정기반의 인자를 최소화하고, 기본값(Default)을 사용함으로써 모니터링 장치/관리 비용 절감

검증 비용 절감

간소화된 검증보고서 양식 개발을 통한 검증비용 절감

※ 외부사업 지침 별지서식 17-3

대안-1

감축기술별 극소규모 감축사업 표준 마련

- 감축 기술 표준
- 에너지공단의 평가 표준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표준

대안-2

극소규모 감축사업 전용 평가 프로세스 정립

- 환경부 협의 제외
- 현장평가 제외(감축량 검증 시 현장검증 실시 → 사업계획서 보완/수정)

대안-3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검증 방법 개선

- 일반/소규모 감축사업과 동일한 검증 방법 적용의 경우 검증비용 단가를 낮출 수 없음

18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비용 효과적인 국외 감축 신사업 발굴

발전소 건설(나 유형)

- 재생에너지 발전소(수력, 태양광) 건설
- 주로 발전사(할당업체)에서 칠레, 베트남 등의 개도국에서 개별사업 추진
- 전력판매 및 배출권 등으로 수익실현
- PA/POA 11개

효율기기 보급(다 유형)

- 쿼스토브, 정수기, 가전제품 등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 중심 프로그램 사업 중점 추진
- PA/POA 24개(CPA 211개)

공공기관 공동투자(라 유형)

-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설은 해외기관이 추진하고, 국내 기업은 배출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부품교체 등 실시
- PA/POA 4개

“국가 NDC 달성을 위한 국외 감축실적 확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감축사업 예상”

대안-1

NDC 활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방안 마련

- 국외 감축사업을 통한 국가 NDC 달성 활용방안 조속한 마련
- 국내기업의 조기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대안-2

비용 효과적인 국외 감축 신사업 발굴

- 기존 개도국 중심 OM 사업에서 수행되었던 사업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감축범위를 확대
- 수소기술, 친환경원료 전환, 탄소포집 등에 대한 감축기술 방법론 개발

대안-3

국외 감축 적극지원

- 국외 감축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용자를 통해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양자협력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19

4. 국내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제도상의 이슈 사항

상쇄 배출권 제출 한도 설정 방식 개선

- 현행 방식: 할당대상업체별로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 인정
- 문제점: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국외 감축실적이 국내 감축실적에 비해 우선 추진 됨에 따라,
 - 국내 외부사업의 축소 예상, 나아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반 확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 대안: 배출권 제출한도 상향 및 국내 상쇄 배출권과 국외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개별 설정 검토 필요

* (WCI) 캘리포니아 4~6%, 퀘벡 8%, (중국) 국내 5%, (일본) 도쿄, 사이타마 지역내 제한 없음

외부사업 지침의 명확화

- 현행: 지침 개정 이후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이 일부 존재
- 문제점: 지침의 내용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사업 추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대안: 정부차원의 외부사업 지침 해설서 발간 필요

공공재원 투입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적용방안 등 조속히 결정될 필요

감사합니다.

[발제 2]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 국내 이전

· 배출권거래제 활용

—

이광호 한국환경공단 상쇄제도운영부 부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현황

한국환경공단 상쇄제도운영부
이광호

Copyright © 2022 한국환경공단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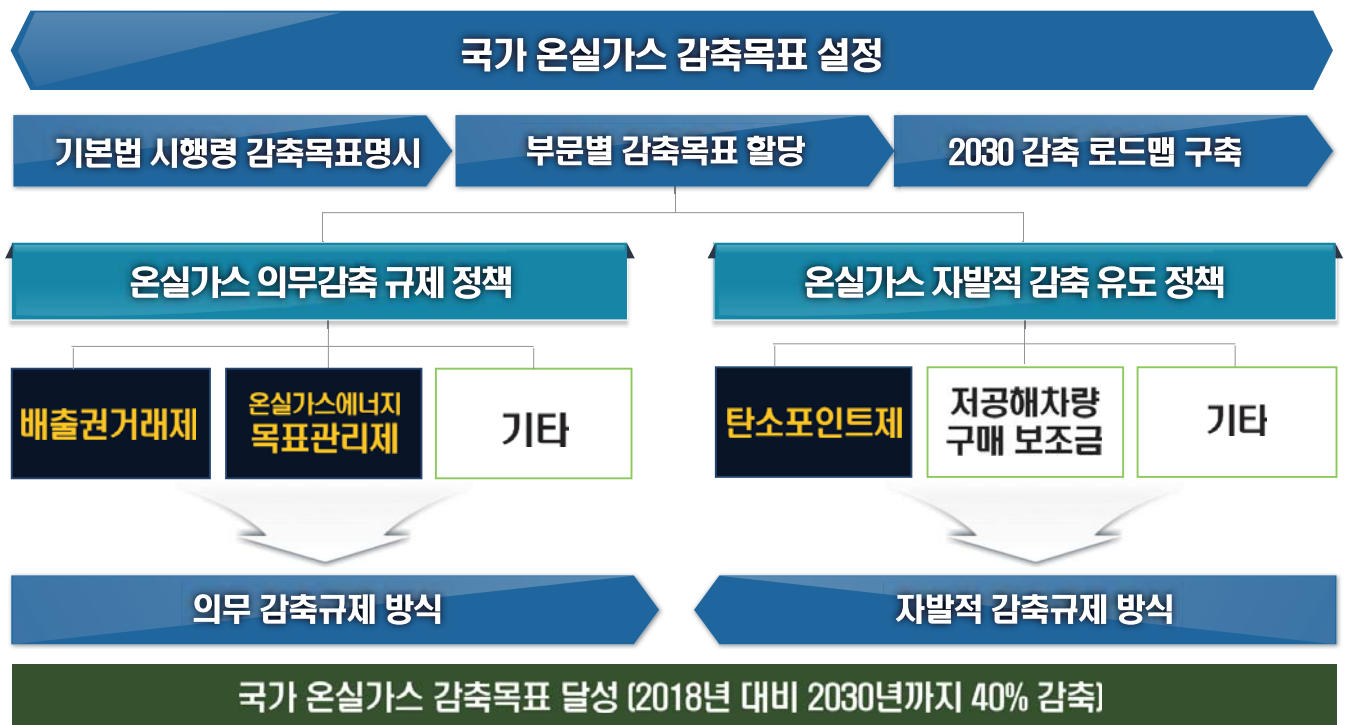
- 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 II. 외부사업 일반현황
- III. 국외 CDM 사업의 외부사업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Copyright © 2022 한국환경공단 All rights reserved

01

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



Copyright © 2022 한국환경공단 All rights reserved

배출권거래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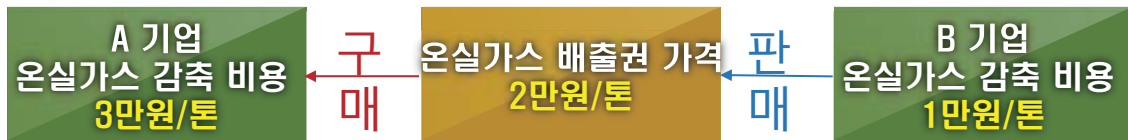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 ▶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
- ▶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Cas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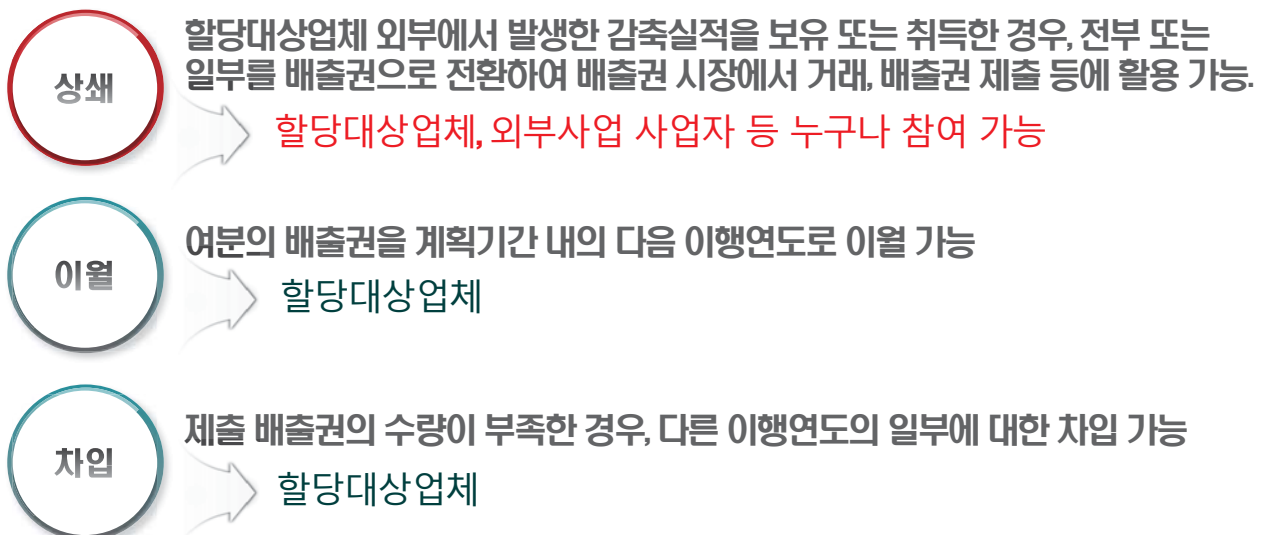
Case2



배출권거래제 유연성 메커니즘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 메커니즘

할당대상업체의 보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상쇄제도 외부사업' 을 실시해 얻은 인증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며, 타 이행연도에서 배출권을 차입해오거나, 배출권이 남는 경우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정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란?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인증등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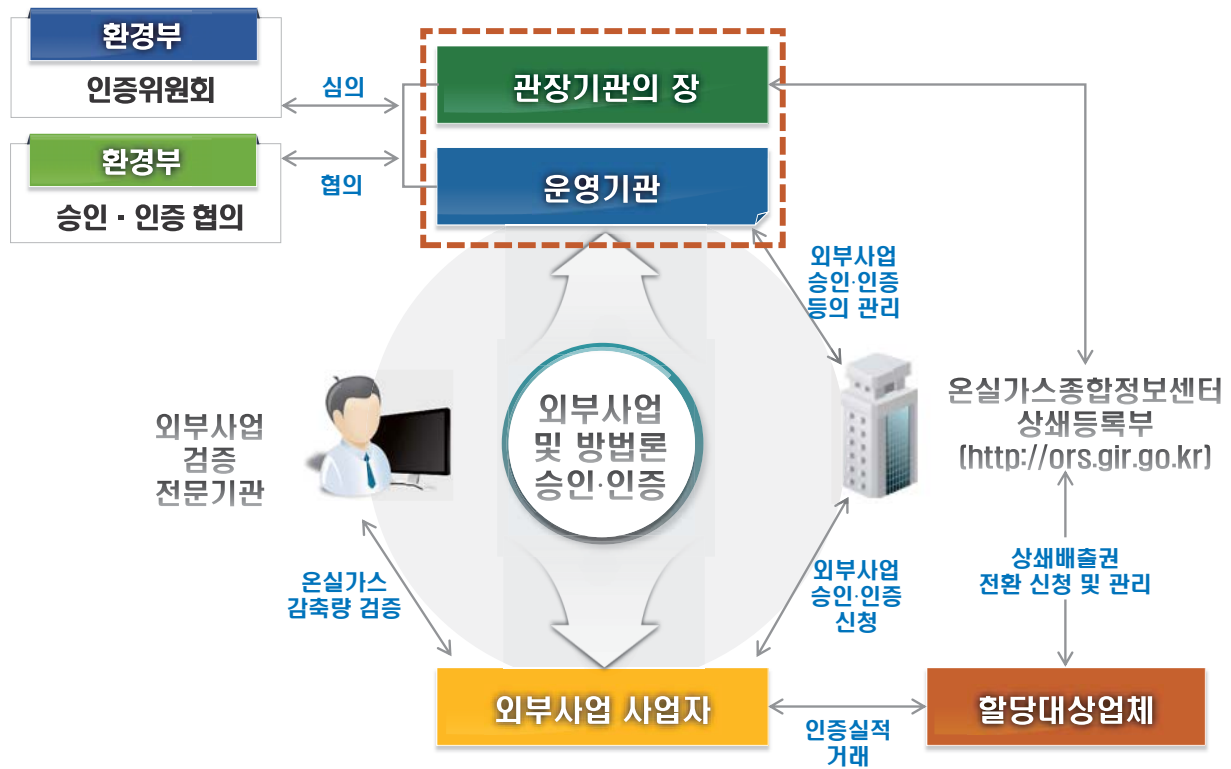
법률 제29조(상쇄) 및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상쇄)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출권으로 전환
-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시행령 제47조(상쇄) 및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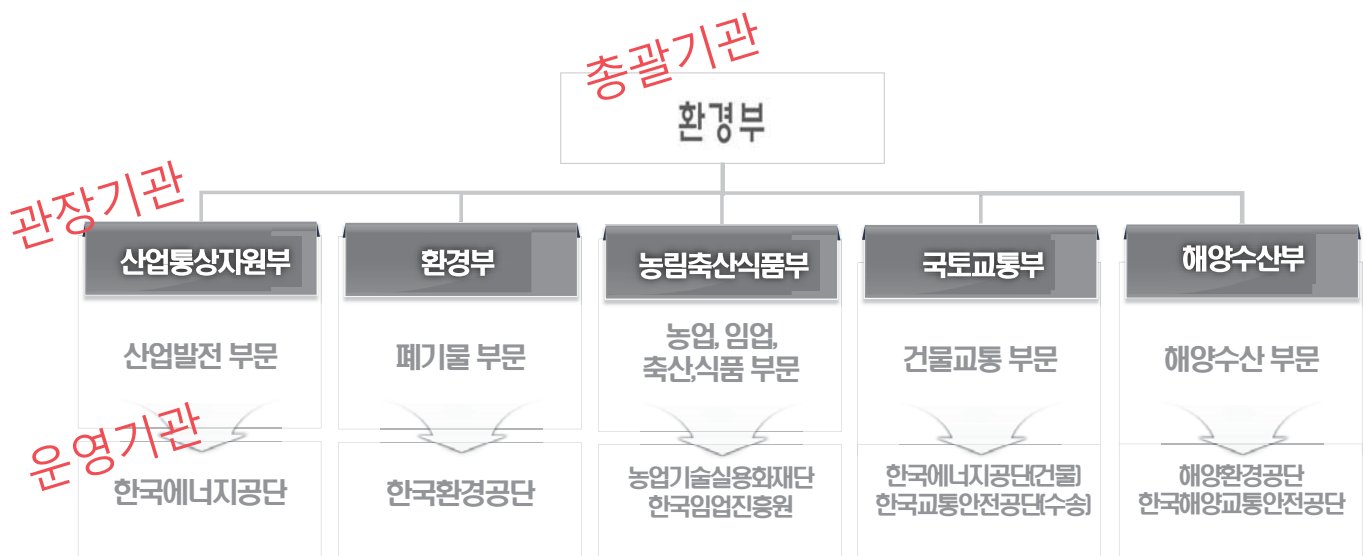
- (상쇄) 상쇄배출권의 사용량 제한(배출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을 경우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경과 시 무효
-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

상쇄제도 추진체계 및 관장기관 역할



상쇄제도 추진체계 및 관장기관 역할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 체계



상쇄제도와 배출권거래제



추진 경과

- 2014.09**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52호)
- 2015.0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시행
- 2015.04** 외부사업 방법론 최초 승인(21건)
- 2015.12** 외부사업 최초 승인
- 2016.0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 외부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해 부문별 관장기관 공동으로 관보 고시 및 기관 위탁 운영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 ➔ 부문별 관장기관 체제로 변경
 - 소규모 기준 상향(기존: 600톤/년 이하, 변경: 3,000톤/년 이하) → 소규모 사업 활성화
- 2017.03**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 ➔ 극소규모 사업 유형 신설 (극소규모: 100톤/년 이하 → 타당성평가 기준 완화)
 - * 별도 형태의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 2018.05**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 ➔ 정책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변경 / 국외 감축사업 인정 방안 마련 등
- 2019.0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 배출량 인증위원회 민간위원 처벌규정 강화

추진 경과

2020.0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취소 관련 개정, 배출권 무상 할당 기준 개선, 내부감축관련 명확화

2021.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 ➔ 사업 승인 이후에 발생한 감축량만을 인증실적으로 인정(제2조)
- ➔ 외부사업 대상으로 파리협정 개시에 따라 국제적인 감축기제를 추가하고,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로 한정
- ➔ 일반 외부사업과 기후변화협약에 국내기업의 외국 청정개발체제 유예기간 설정
- ➔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때 2년 이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 등

2021.5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 ➔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기한 이후 승인된 사업의 갱신 신청



외부사업 일반현황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현황

외부사업으로
활용가능한 방법론

총 271건

'22년 1월 기준

✓ 외부사업 적용 가능 CDM 방법론 211건

※ 2016년 10월 CDM 방법론 211건에 대해
인증위원회 승인

✓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60건

'22년 1월 기준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CDM 포함)

271건



※ CDM사업은 UNFCCC홈페이지 Sectoral scopes 및 국내 관장기관 운영 부문으로 분류

Copyright © 2022 한국환경공단 All rights reserved

15/29

외부사업 승인현황

총 806건

'22년 1월 기준

일반 55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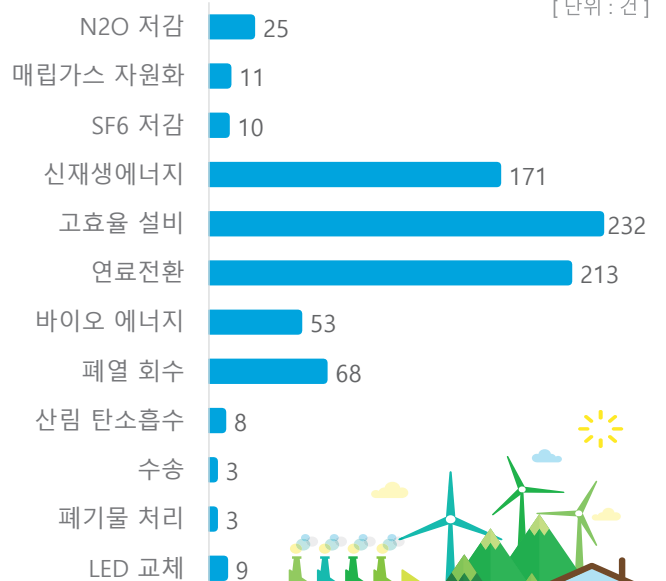
[일반사업] 365건
[KVER] 191건

CDM 250건

[국내 CDM] 99건
[국외 CDM] 151건

연도	사업승인(건)		
	총 사업수	일반사업	CDM사업
2015	61	1	60
2016	12	3	9
2017	25	13	12
2018	243 (KVER 191건)	234	9
2019	55	51	4
2020	141	60	81
2021	269	194	75

사업 유형별 분류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현황

총 37,942,686 톤

'22년 1월 기준

일반(톤)

961,985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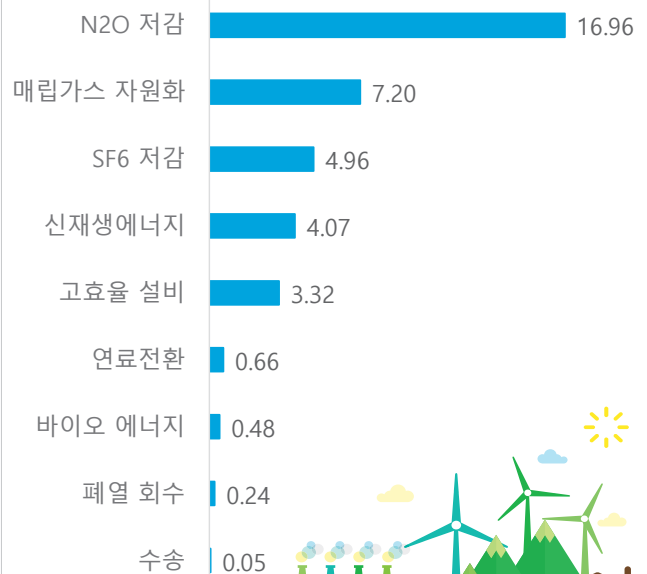
CDM(톤)

36,980,701톤
(97.5%)

연도	감축량(톤)		
	계	일반사업	CDM사업
2015	7,102,025	-	7,102,025
2016	7,692,528	-	7,692,528
2017	4,793,438	15,830	4,777,608
2018	4,478,507	9,878	4,468,629
2019	3,109,352	119,847	2,989,505
2020	3,344,838	194,255	3,150,583
2021	7,421,998	622,175	6,799,823

사업 유형별 분류

[단위 : 백만톤]



국외 CDM 사업의 외부사업 인증

승인 대상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

승인 대상 (제8조 제2항)

-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 사업
- 단,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승인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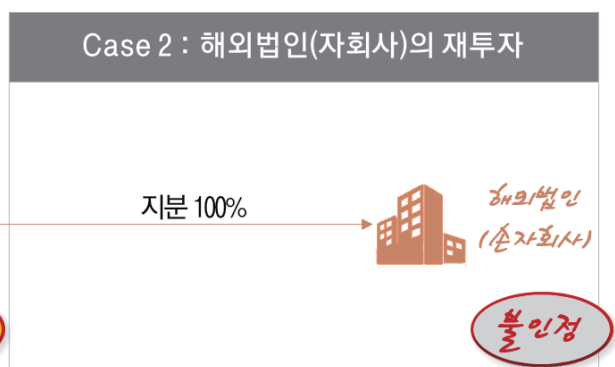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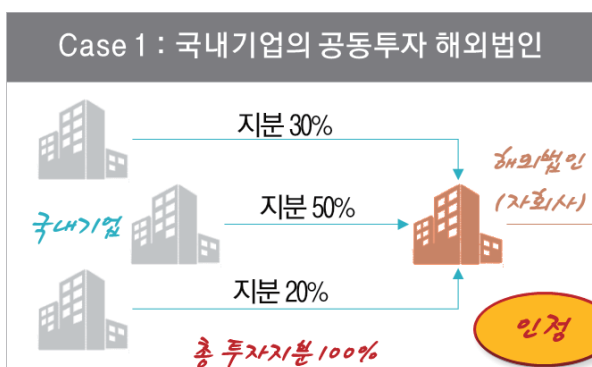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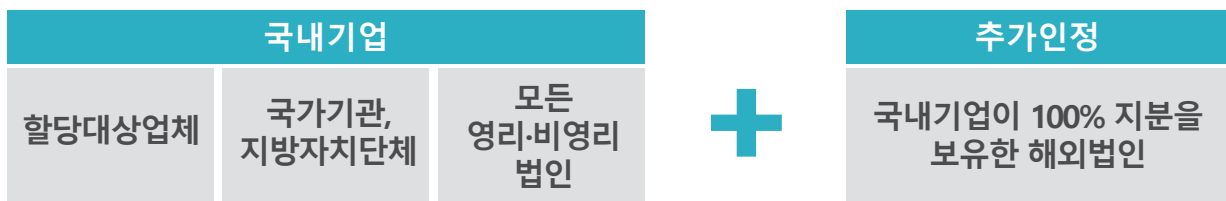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요건

- 1)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2)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의 감축량은 등록 및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 불가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 가능, 국내 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부터 인증 가능
- 3) 외부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함. 단, 의무적 사항의 초과 달성분은 가능함.
- 4) 일반적 경영여건의 실시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함
- 5)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해야 함
- 6)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승인 대상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 인정기준 (별표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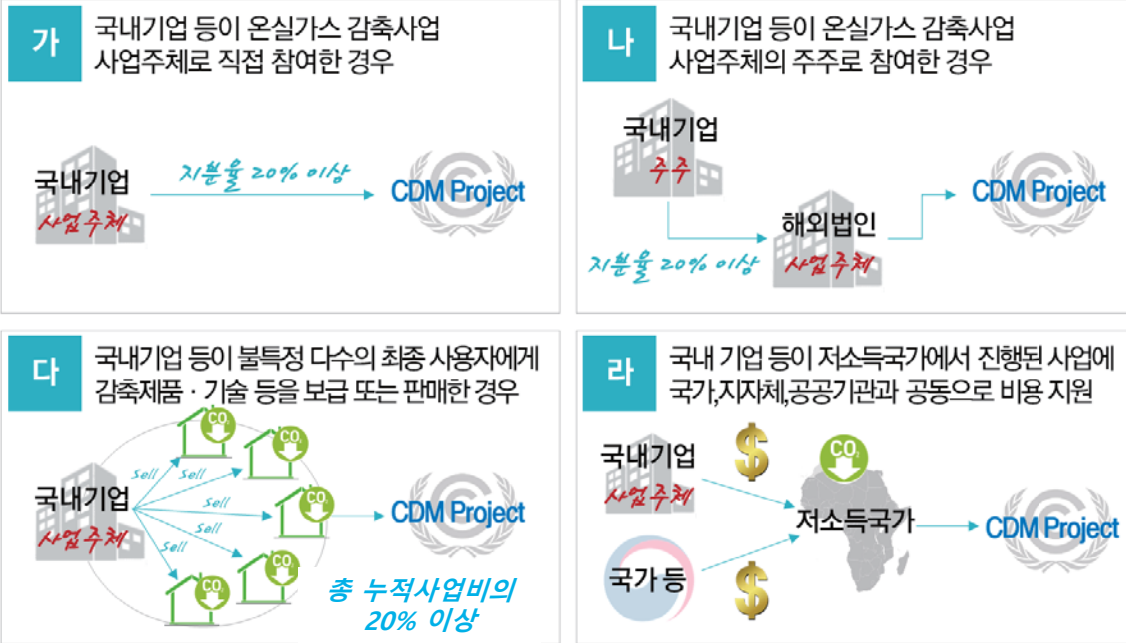
국내기업 등의 범위



승인 대상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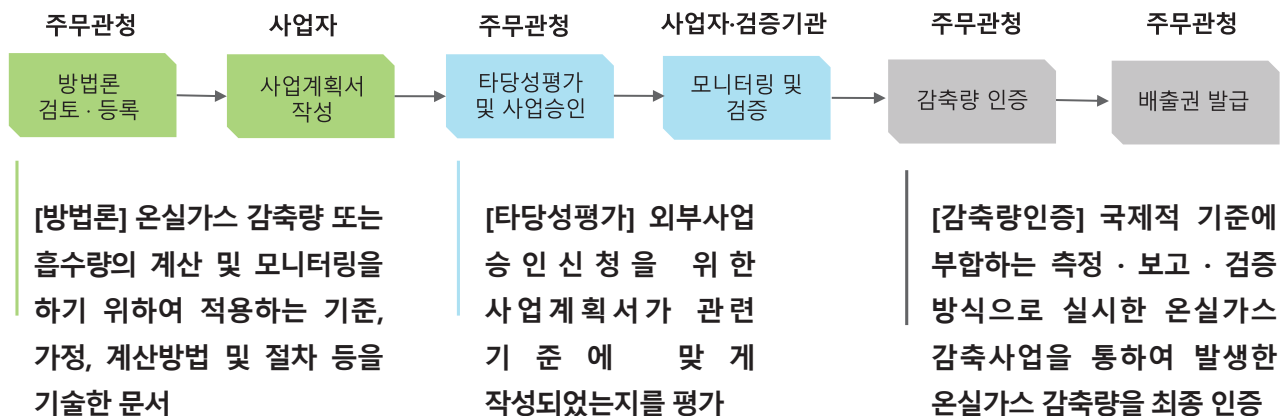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 인정기준 (별표9)

국내기업 등이 직접시행한 CDM 사업의 유형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외부사업 절차(사업등록 및 인증)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제13조)

- CDM 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 수행 가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제30조)

-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승인된 외부사업 시행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 발생 시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본 지침의 검증 대체 가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제31조)

-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가 검증기관으로부터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감축량에 대한 인증 신청

- CDM에 의한 검증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

- 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 2)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에 대한 국문 요약서
- 3)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실적 처분 문서

COP26 결과 Pre-2021 CER*을 국가 NDC에 활용할 경우
6.4조 등록부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Pre-2021 CER의 경우 취소하지 않고 승인/인증 신청

* '13.1.1. 이후 등록된 사업에서 '20.12.31까지 발급된 CER

국외 CDM 사업의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현황

승인 및 인증현황

연도별 현황

연도	사업승인	감축량인증	
	승인건수	인증건수	감축량(톤)
총 계	151	82	4,088,067
2018	0	-	-
2019	0	-	-
2020	78	-	-
2021	73	82	4,088,067

- ✓ 국외 CDM 사업은 2차 계획기간(2018~)부터 인증 가능
- ✓ 2020년부터 사업승인 건수 및 감축량 크게 증가

유형별 현황

유형	사업건수	감축량(톤)
가	-	-
나	12	800,746
다	139	3,287,321
라	-	-

상쇄배출권(KCU) 전환 현황

i-KOC의 KCU 전환 현황

KOC 보유량(톤)		KCU 전환량(톤)
i-KOC 20-22	i-KOC21-23	
-	3,380,190	707,877

- ✓ KOC 보유량 : '22.1 기준 / KCU 전환량 '21.12.31 기준

(참고) 배출권 가격 현황(원)

KAU21	KOC20-22	KOC21-23	i-KOC21-23
35,100	34,500	34,600	34,000

- ✓ '21.12.30 종가기준
(출처: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 data.krx.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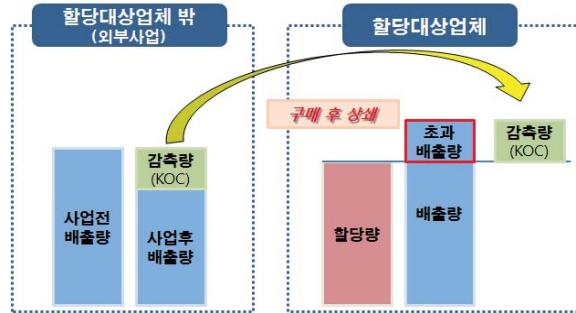
향후 제도운영 고려사항

외부사업 감축량 ▶ 초과배출량에 대한 상쇄



외부사업 유입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초과배출

- 할당대상업체에서 외부사업을 상쇄제도로 활용 시, ETS영역의 실제배출량은 해당량 만큼 초과 배출 가능



배출권거래제와 국외 감축사업 간 배출량 MRV 차이



국외 감축실적 과다 시, 국내 거래제 시장 가격 교란 우려

-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감축설비를 보급하는 '다' 유형과 같은 국외사업은, 사업 특성상 실제 감축여부에 대한 검증이 취약

* MRV : 측정(Measu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ying)

향후 제도운영 고려사항

COP26 결과에 따른 대응



Pre-2021 CER의 NDC 달성을 위한 사용 가능성

- Pre-2021 CER이 NDC 달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 6.4조 등록부를 만들 때까지 Pre-2021 CER은 실적처분(지침 제31조제2항) 없이 승인/인증 신청

3. 2021년 이전 발급된 감축실적(CER)의 사용 조건 및 제한사항은?

- 2013.1.1.일 이후에 등록된 CDM사업에서 2021년 이전에 발급된 CER은 NDC 달성에 사용 가능
- 해당실적은 'Pre-2021 배출감축'으로 6.4조 메커니즘 등록부에 등록되며, 제1차 NDC에만 사용가능
 - 사업의 유치국(host country)은 상응조정 적용을 면제
 - 신규조림과 재조림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NDC에 사용불가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2021.11.13)

향후 제도운영 고려사항

COP26 결과에 따른 대응



Pre-2021 CER의 NDC 달성을 위한 사용 가능성

- 상쇄등록부시스템(ORS) : 공지사항 - 상쇄등록부 업무공지 -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련 알림" (2021.11.16)

공지사항

게시물 조회

제목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련 알림
첨부파일	전체다운로드 붙임1_CMA3결정문.pdf (146,976 Byte)

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3호 및 31조 제2항제3호 관련입니다.
2. 금번 COP26의 CMA3 12b 75b항에서는 '21년 이전의 CER을 국가 NDC로 사용할 경우 6.4조 등록부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6.4조 등록부를 만들때까지 UN에 '13년 이후 등록된 CDM사업(국내·국외) 중 '21년 전 발생한 CER은 취소하지 않고 외부사업으로 승인·인증 신청하도록 사업자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외부사업 지침 별지7호 제출·확인은 종전과 같음

붙임 : CMA 결정문 1부. 끝.

향후 제도운영 고려사항

COP26 결과에 따른 대응



2021년 이후 임시(Provisional) 등록 CDM 사업 관련

- 2021년 이후 CDM 사업활동에 대하여 잠정적(Provisional) 상태를 유지
- 6.4조 메커니즘 전환 기준에 따른 전환 완료시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평가 보류

4. '21년 이후에 임시로(Provisional) 등록된 CDM 사업은 연장되는 것인지?

- ☐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 결정문(CMP Guidance) 주요내용
- 2021년 이후 CDM 사업 활동(Post-2020)의 신규 등록, 갱신, 발급 요청을 6.4조 메커니즘이 운영되는 시점까지 EB가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
 - 2021년 이후 CDM 사업 활동에 대하여 잠정적(Provisional)상태를 유지하며 CMA의 6.4조 메커니즘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은 전환 가능
 - 6.4조 메커니즘 전환 기준에 따라 전환된 CDM사업은 전환일로부터 CDM체제에서 등록취소(De-registered) 되어야 함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2021.11.13)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좌장 :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패널 : **백진우** 국조정실 2050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 팀장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팀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N O T E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